



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이재명 정부가 이루겠습니다

- 김민석 총리,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-
-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담은 「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5~2029)」 논의 -

□ 정부는 11.25.(화)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「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」를 개최하였다.

-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,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.

<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5.11.25. (화) 15:00,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(9층)
- 참석대상 : 국무총리(위원장) 이하 관계부처 장관 9인, 민간위원 15인 총 25인
- 회의안건 : (안건1)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5~2029)(안)
* (별첨) ▲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(안), ▲2023년·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
(안건2)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(안)
※ (서면보고) 2024년·2025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

-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, 「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5~2029)」을 논의하고,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‘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’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하였다.

□ 회의에 앞서,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(위촉기간 : '25.11.17. ~ '27.11.16, 임기 2년)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다.

-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, 단체,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,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안건 1. 「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5~2029)」 >

-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으로, 관계부처 참여하에 2015년부터 수립·이행하고 있다.
-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0~2024)을 통해,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.
 - 그러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고,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, 비만·자살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.
 -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, 아동 학대 신고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. 또한,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.
-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전문가 및 아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, 대국민 공청회 개최(8월)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·검토하였고,
 - 지난 9월 30일, 아동정책실무위원회(위원장: 복지부 제1차관) 논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25~2029)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제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, ▲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, ▲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해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며, ▲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.

-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,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.

< 안건 2. 「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」 주요내용 >

-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('25.7.19)에 따라, 입양 정책 논의 및 개별 입양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, 위원회 운영방안 등 입양정책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 -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, 분야별 전문가와 입양단체 및 입양 당사자, 유관기관 및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.
 - 또한, 국내·외 입양아동의 결연 결정 및 양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, 국내입양 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-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“아동이 나라의 미래인 만큼,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‘함께 행복한 대한민국’이 될 수 있다”라고 강조하며,
 - “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,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,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오늘 참석하신 민간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<붙임>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팀장	이창현 (044-200-2290)
		담당자	사무관	윤철중 (044-200-2291)
담당 부서 <공동, 1호> <2호>	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정연 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 (044-202-3559)
			팀장	윤장열 (044-202-3411)
			사무관	최진선 (044-202-3412)

□ **[근거]** 아동복지법 제10조

□ **[주요 기능]**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,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, 아동정책의 이행 감독·평가 등

(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3.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·조정에 관한 사항
5.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□ **[구성]** : 총 25인

-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(9인), 민간 위촉위원(15인, 임기 2년)

구 분	위원 자격
위원장	국무총리
정부위원(9인)	기획재정부,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 장관
민간위원(15인)	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< 최근 회의 개최 현황 >

- '04년 위원회 구성 이후 '24년까지 총 18차례 개최

- 제15회 회의('21.4.20~26. 서면) :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, 놀이혁신 행동지침, 아동정책기본계획 '21년 시행계획,
- 제16회 회의('22.1.24.) :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, '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, 아동정책기본계획 '22년 시행계획,
- 제17회 회의('23.4.13.) : 새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,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방안, 아동정책기본계획 '23년 시행계획 등
- 제18회 회의('24.3.27~4.2. 서면) : 출생통보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추진상황, '23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, 아동정책기본계획 '24년 시행계획